

주간 통일정세

2014-39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뼈라살포에 남북관계 위협...정부 자제요청·단체 강행(10/9, 조선중앙통신)
 -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9일 '서기국 보도'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언급하며 "최근 모처럼 마련되고 있는 북남관계 개선 흐름을 가로막으려는 단말마적 발악" 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어 "남측이 이번 뼈라 살포 난동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북남관계는 또다시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가 지게 될 것"이라며 "북남관계가 다시 파국에 처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 北, 차대통령 '이중행태' 발언 비난..."신중 기해야"(10/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10일 대변인 담화에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의 인천 방문과 2차 고위급접촉 개최 합의를 상기시키며 "박근혜는 또다시 모처럼 마련된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언동으로 우리의 진정성을 무참히 모독하고 있다"라고 비난함.
 - 이어 박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에 대한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이라며 "박근혜는 악화된 또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마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北 대남기구 "연방제 통일안이 최선...6·15 이행해야"(10/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전선 중앙위원회는 10일 김일성 주석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발표 34주년을 맞아 발표한 '비망록'에서 6·15 공동선언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을 통일 방향으로 명시한 것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은) 6·15 공동선언을 존중해야 하며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비망록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통일 방안"

이라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국통일 방도'를 나열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노선이 이들의 "전면적인 계승이고 심화발전"이라고 강조함.

- 北 "빠라 살포 계속되면 더 강한 물리적 타격"(10/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2일 발표한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 10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빠라 살포와 같은 엄중한 도발이 계속되는 한 그를 막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응은 보다 강도 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또 "지금은 백 마디, 천 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남조선 당국은 이제라도 불미스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관계 개선에 발 벗고 나서겠는가, 아니면 민족을 유혹하고 기만하는 놀음으로 세월이나 허송하겠는가 하는 저들의 진속을 온 겨레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통신은 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매체 고위대표단 방남 이후 대남 비난 자제(10/6, 연합뉴스; 노동신문)
 -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전격 방남 이후 북한 대내용 매체의 대남 비난이 사라져 눈길이 끝났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함.
 - 노동신문은 5일자 1면에 황병서 일행이 방남을 위해 전날 평양에서 출발했다는 보도를 싣고 6일에는 6면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연방제' 통일방안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으며 이외에도 6일자 노동신문은 남측 단체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재중동포 단체가 연방제 통일방안을 찬양했다는 기사 등을 실으며 화해분위기를 띄웠다고 전함.
- 北, 공동선언 이행 촉구... "평화번영 새 시대 열자"(10/7,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남한 방문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북한 매체가 7일 남북 정상회담으로 탄생한 공동선언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함.

- 노동신문은 7일 '자주통일, 평화변영을 위한 투쟁의 기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에 북남관계와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밝은 전도가 있다"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도 7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북과 남이 화해와 단합, 협력을 실현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의거할 유일한 지침"이라고 주장함.
- 北 고위급 訪南 이어 '연방제 통일' 공세 주목(10/7, 노동신문·조선신보)
 - 노동신문은 7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애국애족적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연방제 방식이야말로 나라의 통일을 온 민족의 의사와 요구, 이익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조국통일 방안"이라고 주장함.
 - 조선신보도 7일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을 통일 방향으로 명시한 것을 거론하며 "북남이 합의한 연방연합제의 길로 나가야만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경비정 1척 한때 NLL 침범...남북 함정 서로 사격(10/7, 연합뉴스)
 - 북한 경비정 1척이 7일 오전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 함정 간에 상호 사격이 있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힘.
 - 합참 관계자는 "북한 함정은 모두 조준사격을 하지 않고 경고 및 대응사격을 했다"며 "우리 쪽의 피해는 없고 북한 경비정도 우리가 발사한 포탄에 맞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北, 대북전단 향해 고사총 발사…軍, 기관총 대응사격(10/11, 연합뉴스)
 - 북한이 10일 오후 우리 민간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14.5mm 고사총 10여발을 쏘 일부 탄두가 우리 측 지역에 떨어졌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우리 군은 북한군이 쏜 총탄이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을 확인한 뒤 K-6 기관총 40여발을 인접 북한군 GP(비무장지대 내 소초)를 향해 대응 사격했으며 이후 남북 GP 사이에 2차 총격전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합참은 "이번 상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으며 전방 지역에 경계 및 감시 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특별한 동향은 없지만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미사일전력 통합·자동화…김정은 명령 신속수행"(10/12,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모든 미사일 전력을 통합, 발사체계를 자동화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사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고 최근 1~2년간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목표물에 대한 타격 정확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함.
 - 다른 소식통은 "기존 전략로켓군 예하에는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 여단이 각각 편제되어 있었지만 전략군을 창설하면서 이들 여단이 모두 통합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김정은이 미사일 전력에 대한 '최고 주도권'을 갖게 됐고 그만큼 발사 명령에 대한 반응 속도도 높아지게 됐다"고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北 "선수부상"…영천 '군인 육군5종 선수권대회' 불참(10/6,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이 경북 영천에서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61회 세계군인 육군 5종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6일 밝혔.

- 일단 우리 측은 북한의 최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으로 남북이 대화 국면으로 돌아선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불참 통보가 북측이 밝힌 '선수 부상' 외의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 체류비 일부 내고 귀환(10/7,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에게 "(북측이) 선수촌에 묶은 비용 등 일부를 내고 갔다"며 "조만간 남북협력기금 지원 상한액이 결정되면 북한 부담분을 빼고 우리측 단체에 (북측 비용을) 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는 아직 자세한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측이 낸 돈은 1억~2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짐.

-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 입국(10.11, 연합뉴스)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미국의 '핵무기 없는 세계' 주장 관련 비난(10/7,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7일 논평에서 미국의 '핵무기 없는 세계' 주장 관련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를 계속 추구하는 한 세계의 비핵화는 언제가도 실현될 수 없다'며 '악의 제국이 비핵화와 핵전파방지를 떠드는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는 정치광대극'이라고 비난함.

- 北 "북려 친선 전통 이어갈 것"...양국 수교 역사 강조(10/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6면에 게재한 '조로(북려)친선의 장구한 역사를 되새기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 시기 조로관계는 커다란 생명력을 안고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밀접해지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서로의 지향과 염원에 부합되게 관계 발전을 추동해나가는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조로친선의 역사와 전통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북중수교 65주년에도 北 매체 관련 보도 '잠잠'(10/6,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은 6일 1949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꼬박 65주년을 맞았지만, 북한 신문과 방송 등 모든 매체에서 관련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6일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신문은 매년 10월6일이면 '논설' 형식의 글을 통해 북중 수교 기념일을 축하하고 중국과 친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나 올해는 북한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른바 '꺾어지는 해'(끝자리 숫자가 '0'이나 '5'인 해)라는 점에서 북한의 조용한 분위기가 더욱 눈길을 끈다고 뉴스는 밝힘.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리수용 북한 외무상 사할린 방문…경제협력 방안 논의(10/8, 사할린인포)
 -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8일(현지시간) 극동 사할린주를 찾아 주정부 인사들과 경제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현지 인터넷 뉴스통신 '사할린인포'가 전함.
 - 리 외무상은 회담을 시작하며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등 여러 인사를 만나 양국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하지만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주로 극동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방문했다"고 설명함.
 - 또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성공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경제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고 뉴스는 보도함.
- 북한 강석주, 러시아 식량지원에 감사 표명(10/9, 연합뉴스)
 - 강석주 비서는 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 수교 66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외부세력의 불공평한 러시아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 정부와 국민이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에 대해 보여준 사려 깊은 태도와 진심 어린 식량 지원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고 밝힘.
 - 강 비서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최근 러시아 방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리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는 동안 양국이 검토 중인 경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평가함.
- 러 주재 北 대사, 양국 수교 66주년 기념연회(10/11, 조선중앙통신)
 - 러시아 주재 김형준 북한 대사가 북·러 외교관계 수립(10월 12일) 66주년을 맞아 지난 9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연회에는 알렉산드르 토르신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1부의장,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외무부 북핵담당 특별대사 등 외무

부, 상·하원, 국방부, 원동발전부, 농업부, 교육과학부, 러시아철도주식회사, 과학원 극동연구소, 친선협회 관계자들이 초대됐으며 토르신 1부의장은 "조선은 오래고도 공고한 친선과 선린의 유대로 이어진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우리는 최근 러·조 관계의 발전방향이 두 나라 인민의 근본이익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아. 국제기구

- 북한, 유엔서 첫 인권설명회...“북한 인권 결의안 반대”(10/8, 연합뉴스)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설명회를 갖고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대화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 7일 설명회는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에서 가진 사상 첫 설명회로,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데 대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방어 전략의 하나로 해석된다고 뉴스는 전함.
- 유엔, 북한 김정은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 회부 추진(10/9, 연합뉴스)
 -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인권행위 관련자들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현재는 초안이기는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더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뉴스는 보도함.
- 북한 "우리도 자체 인권 결의안 내겠다"(10/10, 연합뉴스)
 - 북한 유엔대표부는 9일(이하 현지시간) 자국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각국 유엔대표부에 돌렸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함.

- 전날 EU와 일본이 공동으로 만들어 회람시킨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ICC에 세우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국제사회가 이전보다 강한 조치를 추진하자 방어에 나선 것으로 북한 유엔대표부는 편지에서 "EU와 일본이 만든 초안은 즉각적인 대결을 의미한다"면서 자체 결의안 초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힘.

■ 北 강석주, EU에 '북한 인권결의 내용 완화' 요구(10/12, 연합뉴스)

- 지난달 유럽 국가를 순방한 강석주가 지난달 9~10일 벨기에 방문시 람브리니디스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와 만나 EU측과 다시 인권대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그 전제로 북한인권 결의 내용을 완화해달라고 직접 말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12일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美 정부의 '대인지뢰 사용 등 금지' 방침 및 한반도에서만 예외 적용 발표(9.23, 국무부)에 대해 '北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으로 몰아붙이는 동시에 한반도를 세계제패 전략실현의 교두보로 써먹으려는 흉심'이라며 '한반도에서 모든 무력 철수' 주장(10.6, 중앙통신·민주조선)
- 김영남, 10월 7일 駐北 폴란드대사의 신임장 접수(만수대의사당) 및 대사와 환담(10.7,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미동포 '정기열'에게 사회정치학박사학위 수여의식, 10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10.7,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오스트리아 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0돌 기념 우표전시회 합동공연, 10월 2일 '빈'에서 진행(10.8, 중앙통신)
-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유엔통보모임, 10월 7일 유엔본부청사에서 진행(10.8, 중앙통신)
- 駐北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세계식량계획 대표부 성원들과 정일심 동포(공화국영웅 안동수 유가족) 및 駐北 베트남 대사, 10월 9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10.9,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조선인 고급학교 학생조국 방문단, 10월 9일 평양 출발(10.9,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 주재 외교관 체육대회 평양 대성산유원지에서 7일에서 12일에 걸쳐 열림(10.12, 중앙통신)
- 美 케리(국무장관) 등 '北 인권·핵문제 지적'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궤변, 극악한 적대시 책동"이라고 비난 및 '인권문제의 국제적 협력용의 및 핵포기 不可' 지속 강조(10.11, 평양방송)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10월 8일 北 '黨 창건' 69주년 즈음 北 노동당 중앙총에 꽃바구니 전달(10.11, 중앙방송)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당 창건기념일 금수산궁전 참배 안 한 듯(10/1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최근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매년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월10일)마다 해오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집권 첫해인 2012년과 작년 모두 10월 0시 군 간부들과 함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날 오전 4시께 이 소식을 보도했지만 북한 매체는 10일 오전 8시 현재 김 제1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뉴스는 덧붙임.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北 당·국방위, 선수단 환영 연회…‘訪南 3인’ 총출동(10/7, 조선중앙방송)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선수단을 위해 6일 평양 목란관에서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함.
 - 환영 연회장에는 지난 4일 인천을 방문해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했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모두 참석했으며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체육선수와 감독, 관계자들, 선수 가족들이 연회에 초대되었다고 방송은 전함.
 - 이들 외에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박도춘·김평해 당 비서, 로두철·김용진 내각 부총리,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 럽철성 군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종무 군 중장(별 2개) 등이 참석함.

- 리수용 북한 외무상 열흘 방러 일정 마치고 귀국(10/10, 이타르타스통신)
 - 지난달 말부터 열흘 동안 러시아를 방문했던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10일(현지시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함.
 - 리 외무상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현지 주재 이타르타스 특파원과 한 인터뷰에서 "10일 간의 방러 기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비롯한 모든 러시아 인사들과의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함.

- 北 김정은 고모 김경희, TV 기록영화에 다시 등장(10/12,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 김경희의 모습이 담긴 기록영화를 조선중앙TV가 12일 방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중앙TV가 12일 오전 내보낸 기록영화 '온 나라에 체육 열풍을 일으켜주시여'에서 김경희는 김 제1위원장과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모습(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두 차례 포착되었다고 뉴스는 전함.

다. 공식 행사

- 北,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보고대회…김정은 불참(10/7,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는 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김 위원장의 당 총비서 추대 17주년 중앙보고대회가 열렸다고 보도함.
 - 중앙TV 화면에 잡힌 중앙보고대회 주석단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김양건 당비서 등 지난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남한을 다녀간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박도춘·강석주·김평해·곽범기·오수용 당비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 등이 나왔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은 보이지 않았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北, AG선수단 귀환 대서특필…'방남 3인' 소식 빠져(10/6,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 매체가 6일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북한 선수단의 귀환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으나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명분으로 남한을 찾았던 황병서·최룡해·김양건 등 '실세 3인방'의 방남 활동과 귀환 소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신문은 6일 1~3면을 선수단의 평양 도착 기사와 시내 퍼레이드 사진으로 모두 채웠으며 1면에서 '주체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떨친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을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선수단 시내 퍼레이드 소식을 상세히 전하며 이번 아시안게임의 성과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노동당의 '체육중시사상'과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임을 크게 부각함.

- 北 신문, 당창건 기념일 앞두고 김정은에 충성 강조(10/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억척불변하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우리 당은 불멸의 태양기를 진두에 높이 날리며 영도자의 사상과 위업에 끝까지 충직할 것"이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함.
 - 신문은 또 "혁명적 원칙,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현대판 종파분자들을 단호히 적발숙청했다"며 작년 12월 장성택 처형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수령의 사상과 영도에 도전하는 불순이색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리려는 혁명적 기개"라고 주장하며 김정은 제1위원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보냄.

- 北, 김정일 총비서 추대 17주년...김정은에 충성 다짐(10/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1면 사설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다고 해도 장군님(김정일)의 위업과 유훈에 끝까지 충실할 것"이라며 "김정은 동지는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라고 밝혔다. 신문은 사설과 함께 김정일 위원장의 대형 컬러 사진도 게재함.
 - 노동신문은 8일 2면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당 총비서 추대 17주년 중앙보고대회 소식을 실고 3면에는 김기남 당비서가 보고대회에서 한 연설 전문을 게재했으며 5면에 실린 '만년재보'라는 제목의 글은 "모든 당 일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더욱 반석 같이 다지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데 당 사업의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통신, 인천AG 결산..."조선열풍 일으켰다"(10/8,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8일 인천 아시안게임을 결산하는 기사에서 "조선 선수들의 경기과정은 대회에 '조선 열풍'을 일으켰고 이는 세계 언론계와 체육계의 관심을 모았다"며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조선은 이 대회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 면모를 뚜렷이 과시했다"고 밝힘.
 - 한편 노동신문은 8일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을 "장하고 대견한 우리의 아들 딸"로 치켜세우며 이들이 지난 5일 귀환했을 때 환영 인파 속에서 "우리 자식도 체육을 시키겠소!"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소개하기도 함.

- '黨 창건(10.10)' 69주년 즈음 국가과학원에 김일성·김정일 동상 건립 제막식, 10월 6일 진행 및 김정은 黨 제1비서와 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등 명의 꽃바구니 진정(10.6,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黨 총비서' 추대 17주년 및 '黨 창건' 69주년 즈음 「농근맹」 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경축공연(사회주의 협동벌에 울리는 노동당 만세소리), 10월 6일 평안남도 숙천군 열두삼천농장에서 진행 및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등 관람(10.6,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黨 총비서 추대' 17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10월 7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10.7,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여맹원들의 웅변모임(백전백승의 조선노동당), 10월 7일 '김정일 黨총비서 추대(10.8) 17돌 및 黨창건(10.10) 69돌' 즈음 여성회관에서 진행(10.7,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리혜경(女, 개성시 거주)에게 100회 생일상 전달(10.8, 중앙통신)
-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절대적 권위와 안녕을 백방으로 옹호 보장해야 한다'며 '당의 통일단결을 쪼먹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로 묵과하지 말고 제 때에 철저히 짓밟개 버려야 한다'고 강조(10.10, 중앙통신·중앙방송)
- 노동당 창건일 기념해 김영남, 박봉주, 황병서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 책임일꾼들, 10월 10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0.10,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전국 道 대항 군체육육대회-14', 10월 10일 폐막(10.10, 중앙통신)
- '김정일의 사상이론 활동과 현명한 영도에 의해 노동당은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비상히 강화되게 되었다'며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당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라고 강조(10.12, 중앙통신·노동신문)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WFP "지난달 대북식량 지원 소폭 증가...여전히 부족"(10/8,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가 7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여전히 지원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함.
 - 실케 버 WFP 아시아지역 대변인은 "영양강화 식품(제조) 재료가 여전히 부족해 지난달 지원 목표인 180만 명의 절반에게만 영양강화 식품을 전달했다"고 설명하며 이어 "국제사회의 모금 부진으로 북한에 지원할 곡물을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 FAO "北 올해 쌀 생산량 190만t 예상...작년과 비슷"(10/12, 연합뉴스·러시아의소리)
 - 12일 FAO가 최근 웹사이트에 게재한 '식량전망'(Food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 예상치는 190t으로 FAO의 작년 북한 쌀 생산량 추정치와 같은 규모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함.
 - FAO 북한사무소 대표는 최근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600만t에 달할 것이라며 북한이 3~4년 후면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할 것이라고 러시아의소리 방송에 밝힘.

라. 대외 경제관계

- 리수용 "카타르서 차관 도입해 북-러 농업협력에 투자 계획"(10/7, 리아노보스티 통신)
 -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7일(현지시간) 극동 하바롭스크주를 찾아 외국 자본 차입을 통한 농업 협력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함.
 - 리 외무상은 "러시아 방문 기간에 농업분야 장기 협력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일부러 극동 지역을 방문했다"면서 "양국 협력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가 농업"이라고 강조함.
 - 또 "곡물 및 채소 재배, 목축뿐 아니라 생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하는 등의 장기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카타르 차관으로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北, 러시아와 나진-나훗카 정기화물선 운항 논의"(10/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과 러시아가 나선 경제특구와 러시아 동부 도시 나훗카를 오가는 정기 화물선 운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함.
 - 연해주 정부는 홈페이지에서 "북한 나선경제특구 대표단이 8일 연해주 나훗카시(市) 관계자와 면담하고 양국 항구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이 자리에서 나훗카·보스토치니 등 러시아 극동지역의 항구와 북한 나진항을 연결하는 정기 화물선 운항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방송은 전함.

- 북·중, 백두산에 관광코스 추가 개통(10/11, 장춘일보)
 - 북한과 중국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백두산에 양국을 오가는 관광루트를 추가로 개통했다고 중국 장춘일보(長春日報)가 11일 보도함.
 - 백두산이 걸쳐 있는 북한 양강도 삼지연군과 중국 창바이산(長白山)관리위원회 츠난(池南)구는 최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백두산의 북한 지역 단체관광을 시작했으며 중국인 관광객들은 북한에 있는 백두산 동파(東坡) 코스와 혜산시, 보천 보기념관 등을 1박2일간 여행하며 요금은 1인당 1천100위안(19만원)이라고 신문은 전함.

- 北 이동통신사 대주주 오라스콤 회장 방북(10/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이동통신사 '고려링크'의 대주주인 이집트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이 12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12일 사위리스 회장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으나 방북 목적과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음.

사위리스 회장은 과거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로는 2012년 2월과 10월 방문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임.

- 제6차 전국대학생정보과학기술성과 전시회(1,300여건의 정보기술제품) 개막식, 10월 6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김승두(교육위원장)·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10.6,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과대학 에너지초연연구소 과학자들이 개발한 무선지체발파기(무선원격조종)의 "단번발파·미리초지체 발파 실현" 및 '발파 효율성·굴진속도 배가 및 안전성·시간절약' 등 현장 도입성과 선전(10.6, 중앙통신)
- 황해남도 물길건설자들, 10월 6일 물길공사장 5만산 발파 진행(10.7, 중앙방송)
- 北, 중앙동물원 1단계 보수공사 90% 진행(10.8, 중앙방송)
- 北,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 해주·강계·원산·청진잔디연구소들 건립(10.10, 중앙방송)
- '신형 탄소주광치료기(자외선·가시선 등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질병치료 이용)'의 '피부궤양·관절염 등 질병에 빠른 치료효과' 등 선전(10.11,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北신문 "대학생 2개 이상 외국어 완전 습득해야"(9/25, 교육신문)
 - 북한의 주간 '교육신문'(9월 25일자)은 '대학들에서 외국어 교육을 더욱 강화하자'란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대학 기간에 반드시 2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완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학습 열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외국어 교육 강화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뜻'이라며 김 제1위원장이 "여러 차례 대학에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쳤다"고 전함.

- 北, 체육대회 명칭에 '서기 연도' 사용 눈길(10/12,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 명칭에 국제적인 서기 연도를 이례적으로 사용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은 이달 1~10일 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 각층이 참여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14'를 개최했는데 대회 명칭에서 숫자 '14'는 2014년을 줄인 표현으로 북한이 '주체연호'가 아닌 서기 연도만 쓰는 사례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주목됨.
 - 북한이 대회 명칭에서 서기 연도를 쓰는 것은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뉴스는 밝힘.

- 北, 교사에 김정은 '패기머리' 주문... "본보기 돼야"(8/15, 인민교육; 10/12, 연합뉴스)
 - 북한의 격월간 교육잡지 '인민교육' 2014년 4호(8월 15일 발행)는 '머리단장과 외모'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 교원들은 옆머리와 뒷머리를 높이 올려 깎고 윗머리를 뒤로 빚어넘긴 머리형태 등 패기머리, 상고머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함.
 - 글에서 묘사한 헤어스타일은 '패기머리'로 불리우는 김 제1위원장의 독특한 머리 형태와 거의 흡사하며 이 헤어스타일은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것으로 북한 매체가 젊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김 제1위원장의 헤어스타일을 따라 한다는 소식을 전한 적은 있지만, 공식 매체에서 주민을 상대로 지도자와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라고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

- 전국 道대항 군중체육대회-14, 일부 경기종목(여자 그네뛰기, 800m 달리기 등) 종료(10.8, 중앙통신)
- 홍은정 선수(*제17회 인천 AG 금메달), '2014 국제체조연맹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중국 난징, 70여개 국가·지역 남녀 600여명)' 여자 도마경기 금메달 획득(10.11, 중앙통신·중앙방송)
- 체육절(10월 두 번째 일요일)을 맞아 '조선의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체육절을 뜻깊게 맞이하였다'고 보도(10.12, 중앙통신)
- 北 리세광 선수, '제45차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중국 난징) 도마에서 금메달 획득(10.12)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윤병세 “北영변원자로, 계속가동 시각 많다” (10/7,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일 북한이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는 미국 핵 군축 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의 분석과 관련, "아직도 계속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함.
 -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변 원자로의 중단 여부, 중단했다면 어떤 이유로 했는지 등에 대해 반드시 (언론) 보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이같이 말함.
 - ISIS는 지난 5일 북한이 연료봉 교체나 내부 시설 보완작업 등을 하느라 영변의 5MW급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분석함.

나. 미·북 관계

- 미 국무부, 북한에 긴장고조 행위 중단 촉구 (10/8,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북간 상호사격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간) 충돌 위기를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함.
- 北 “6·25 미군 유해 나뒹군다…발굴 중단 美 책임” (10/13, 연합뉴스)
 - 북한은 13일 6·25 전쟁 참전 미군 유해들이 유실될 위기에 놓였다고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이 중단된 것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탓이라고 주장함.
 -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관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 장관이 지난달 19일 미군 유해 발굴이 중단된 책임을 북한에 돌리는 발언을

했다며 발굴 작업은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인 위성 발사를 도발로 걸고든 미국의 날강도적이고 일방적인 처사에 의해 중단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담화는 또 "미 행정부의 천만부당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에서 발단된 일방적인 중단 조치로 우리 공화국에 조직됐던 유해 조사 및 발굴 기구도 이제는 이미 해체된지 오래"다며 이어 "역사는 날강도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미(북미) 쌍방 이 합의한 미군 유해 발굴 문제와 같은 인도주의 사업조차 무지막지하게 파탄시킨 미 행정부의 반인륜적 범죄를 두고두고 저주하며 단죄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함.

다. 중·북 관계

- 중국 관영언론 "북한, 주변국 갈등을 이익에 이용" (10/9, 연합뉴스)
 - 중국 관영매체는 9일 "평양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주변국들의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고 주장함.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조선이 고립에서 탈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임무다'라는 사실에서 현재 동북아시아에는 진지하게 북한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 간 협력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힘.
 - 북한이 주변국들의 갈등을 이익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미·중 간 군사적 갈등, 중·일 간 과거사·영유권 충돌상황 등을 고립 탈피를 위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됨.
- 중국 "북중, 각 계층간 정상적 왕래 유지하고 있다" (10/10,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10일 '냉기류'에 휩싸여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북중 관계와 관련,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각 계층 간에 우호적인 왕래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잠행' 중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동향을 묻는 말에는 "조선(북한) 지도자에 대한 부분은 조선의 내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지 않겠다"고 밝힘.
 - 한편, 북한과 중국은 그동안 '혈맹'을 과시해왔지만, 근년 들어 고위급 인사의

왕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다 수교 65주년 기념일(10월6일)에는 축전을 교환했다는 소식조차 나오지 않아 양측 간 냉기류가 어느 때보다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북·중, 백두산에 관광코스 추가 개통 (10/11,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백두산에 양국을 오가는 관광루트를 추가로 개통했다고 중국 장춘일보(長春日報)가 11일 보도함.
 - 백두산이 걸쳐 있는 북한 양강도 삼지연군과 중국 창바이산(長白山)관리위원회 츠난(池南)구는 최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백두산의 북한 지역 단체관광을 시작함.
 - 중국인 관광객들은 북한에 있는 백두산 동파(東坡) 코스와 혜산시, 보천보기념관 등을 1박2일간 여행하며 요금은 1인당 1천100위안(19만원)으로 책정됨.

라. 일·북 관계

- "일본인 55%, 납치문제 해결 기대 안해" <아사히조사> (10/7, 연합뉴스)
 - 아사히(朝日)신문이 이달 4~5일 실시한 일본 내 전화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납치문제가 해결을 향해 진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55%가 기대할 수 없다고 답하였고,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은 29%였음.
 - 북한이 납치문제 재조사에 1년이 걸린다고 설명한 뒤 조사 진행 상황의 첫 보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대응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은 89%에 달함.
 - 그럼에도, 일본인 납치문제를 다루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50%로 그렇지 않은 응답자(31%)보다 많았음.
- 북한서 돌아온 조선총련의장 "김정은 매우 건강하다" (10/8, 연합뉴스)
 - 약 8년 만에 북한에 다녀온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이 최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건강하다고 평가함.
 -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그는 북한 방문을 마치고 7일 오후 도쿄

하네다(羽田) 공항에 도착해 김 제1위원장이 "현재도 당, 정부, 군을 장악하고 정력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매우 건강하다"고 말함.

- 한편, 허 의장은 지난달 6일, 2006년 일본이 대북제재를 단행한 후 조선총련 의장으로서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해 약 한 달가량 체류하며 방북 기간 최고인민회의 재일 대의원 자격으로 출석, 북한 정권수립 66주년을 기념해 열린 중앙보고 대회에도 참가하고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도 면담함.

마. 리·북 관계

- 리수용 "카타르서 차관 도입해 북-러 농업협력에 투자 계획" (10/7, 연합뉴스)
 -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7일(현지시간) 극동 하바롭스크주를 찾아 외국 자본 차입을 통한 농업 협력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리 외무상은 "러시아 방문 기간에 농업분야 장기 협력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일부러 극동 지역을 방문했다"면서 "양국 협력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가 농업"이라고 강조하며, "곡물 및 채소 재배, 목축뿐 아니라 생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하는 등의 장기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언급함.
 - 이과 관련 카타르 차관으로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슈포르트 주지사도 리 외무상의 농업 분야 협력 제안에 동의를 표하면서 이밖에 문화·스포츠, 항공기 제작 등의 분야 협력도 제안함.
- "北, 러시아와 나진-나훗카 정기화물선 운항 논의" (10/9, 연합뉴스)
 - 북한과 러시아가 나선 경제특구와 러시아 동부 도시 나훗카를 오가는 정기 화물선 운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함.
 - 연해주 정부는 홈페이지에서 "북한 나선경제특구 대표단이 8일 연해주 나훗카시(市) 관계자와 면담하고 양국 항구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나훗카·보스토치니 항구는 최근 물동량이 계속 늘어나 항만 확장 공사를 벌이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구와의 협력 확대도 모색하고 있는 바, 나진항을 오가는 정기 화물선 논의도 이 같은 협력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알려짐.

- 북한 강석주, 러시아 식량지원에 감사 표명 (10/10, 연합뉴스)
 - 북한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는 9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열린 북-러 수교 66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외부세력의 불공평한 러시아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 정부와 국민이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에 대해 보여준 사려 깊은 태도와 진심 어린 식량 지원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고 러시아의 식량지원에 감사를 표명함.
 - 또한 북한은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교시에 따라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최근 러시아 방문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리 외무상이 러시아를 찾는 동안 양국이 검토 중인 경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평가함.
 - 이에 대해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티모닌은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이나 여타 국제기구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서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러시아의 조치와 노력을 지지한데 대해 사의를 표시함.

- 北 "북러 친선 전통 이어갈 것"...양국 수교 역사 강조 (10/12, 연합뉴스)
 - 북한은 12일 북한-러시아 수교 66주년을 맞아 양측의 역사적 우호관계를 부각하며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 지난 9일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북러 수교 66주년 기념 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는 김형준 주러 북한 대사와 알렉산드르 토르쉬 러시아 연방회의(상원) 제1부의장, 러시아 6자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외무부 북핵담당 특별대사가 참석하였음.
 - 북한이 올해 북러 수교 기념일을 맞아 연회를 개최한 데 이어 양측의 친선을 강조하는 글을 노동신문에 게재한 것은 북한과 중국의 수교 기념일에 잠잠했던 것과는 뚜렷이 대비됨.

바. 기타

- WFP “지난달 대북식량 지원 소폭 증가…여전히 부족” (10/8, 연합뉴스)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가 7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여전히 지원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함.
 - WFP는 지난달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91만3천여 명에게 약 2천300t의 식량을 지원했는데, 이는 8월과 비교해 지원을 받은 주민은 약 70만 명에서 21만여 명 더 늘었고 지원한 식량 규모도 2천75t에서 약 10% 증가한 수치임.
 - WFP는 지난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약 240만 명에 영양강화 식품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올해 6월부터 지원 대상을 180만 명으로 축소하고 또 지원하는 식량 규모도 월평균 1만t을 계획했지만 최근 3개월간 유엔의 식량구호기구가 북한 주민에게 지원한 식량은 월평균 2천t에 불과함.

- 유엔, 북한 김정은 '反인권 혐의'로 국제법정 회부 추진 (10/9, 연합뉴스)
 - 유엔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됨.
 -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함.
 - 이는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서 세운다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의 골격을 유지한 채 최종안을 마련, 유엔 산하 관련 위원회와 유엔 총회에서 차례로 표결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함.

- 북한 “우리도 자체 인권 결의안 내겠다” (10/10, 연합뉴스)
 - 유럽연합(EU) 등이 북한의 반(反)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 결의안을 추진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함.
 - 8일 EU와 일본이 공동으로 만들어 회람시킨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ICC에 세우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국제사회가

이전보다 강한 조치를 추진하자 북한 유엔대표부는 9일(이하 현지시간) 자국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각국 유엔대표부에 돌렸음.

- 북한은 결의안 초안이 비공개 회람되기 하루 전인 7일 리동일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유엔에서 북한 인권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으나 편지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로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제출할지는 미지수로 보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국 '북한 남침시 필요하면 핵무기 사용' 입장 밝혔다 (10/8, 연합뉴스)
 - 패네타 전 장관은 7일(현지시간) 펴낸 회고록 '값진 전투들'(Worthy Fights)에서 한국 측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논의했다고 소개하고 "북한이 침략한다면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리의 오랜 공약을 확인했다"고 설명함.
 - 패네타는 그 전해인 2010년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방한했을 때에도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 침략에 따른 비상계획을 보고하면서 "만일 북한이 남침 한다면 우리의 전쟁계획은 미군 사령관이 모든 한국과 미국의 병력에 대한 명령권을 갖고 한국을 방어하도록 돼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핵무기 사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전함.
 - 그는 미 본토에 미사일 공격 등 적국의 위협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이 같은 시나리오를 감행할 잠재적 국가들이지만 북한이 가장 우려스럽다. 북한은 지구 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위험한 국가다"라면서 "우리가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예측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함.

- 美,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우리측에 사전 설명 (10/6, 연합뉴스)
 - 방한중인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일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가이드라인 개정 배경과 개정시 포함될 주요 요소에 대해 설명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전함.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 없이는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함.
 - 이에 대해 시어 차관보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함.

- 벨 전 사령관 "미국의 사드 공개 압박은 잘못" (10/8, 연합뉴스)
 - 버윌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이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인 데 대해 "미국이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고 무책임하다"고 밝힘.
 - 벨 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나는 사드의 한국 배치에 분명히 동의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압박하는 방식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언급, "한국의 고위급 안보전문가 대부분은 사드의 배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것이 한국 국민에게 복잡한 이슈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나는 한국의 정치환경과 현실을 전적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함.
 - 그는 특히 "나는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입지에 올라서기 위해 사드를 지렛대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러나 한국은 우리의 친구이며, 친구끼리는 먼저 사적으로 얘기하고 나서 일반 대중에게 이해와 지지를 구해야 한다"고 언급함.

- 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조건 최종 조율 착수 (10/11,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4차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 시기와 조건에 대한 최종 조율에 착수함.

- 그동안 전작권 전환 시기의 명시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여온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제시하되 구체적인 날짜를 적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대표로 참석했으나 미국 측 참석자들은 확인되지 않았고,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 뒤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임.
- 한미, 원전사고 대응 협력방안 등 논의 (10/12,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정부는 13~15일 서울에서 33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열어 원전사고 대응에 관한 협력 등 원자력 관련 현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함.
 - 올해 회의에서는 크게 원자력 정책과 기술협력 파트에서 총 90여개의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정책 부분에서는 두 나라가 각자 추진하는 원자력 프로그램 정보를 교환하고 핵 비확산체제 등 최근 이슈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임.
 -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원전사고 대응 관련 의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며 이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원자력 안전성 강화와 핵안보 증진을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함.

나. 한·중 관계

- 정부 "정당한 법집행에 수어민 폭력저항해 사고발생" (10/10, 연합뉴스)
 - 정부는 10일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어선의 선장이 우리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해 이를 주한 중국대사관측에 알려주었으며 유족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힘.
 - 이번 사건과 관련,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폭력적 법집행 행동으로 중국어선 선장이 사망하게 된 데 대해 경악감을 느끼고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즉각 이 사건을 진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할 것과 조사 및 처리 관련 상황을 즉각 중국에 통보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우리 관계 당국의 1차 발표에 의하면 이번 사고는 불법 조업에 대한 우리 해경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 중국 어민들이 폭력적으로 저항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전달함.

■ 중국, 자국어민 사망에 권영세 대사 사실상 초치 (10/12, 연합뉴스)

- 중국정부가 지난 10일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어선 선장이 우리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를 사실상 초치한 것으로 확인됨.
- 12일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주요외교소식'에 따르면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는 지난 10일 권 대사를 '긴급약견'(緊急約見)하고 중국어민 사망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제기함.
- 그러나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당시 권 대사와 류 부장조리의 만남은 중국어민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잡혀 있던 약속이었다"며 "중국 외교부 측에서 초치라고 표현한 적은 없었다"고 언급하였음.

■ 김무성 중국 항발...내년엔中共산당 방한 추진 (10/13, 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박4일간 중국 공산당의 초청을 받아 방중하여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새누리당과 공산당의 첫 정당정책대화에 참석할 예정임.
- 김 대표는 방중 기간 정당교류 정례화를 공식 제안, 내년에는 중국 공산당을 한국에 초청해 제2차 정당대화를 열 예정이며, 새누리당은 이번 행사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중국 방문 당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4개 전략대화가 모두 완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김 대표와 시 주석은 정당정책대화 당일인 14일 오후께 만나 한중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고,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는 오찬을 함께할 계획임.

다. 한·일 관계

- "日정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기지 사용에 개입해야" 논란 (10/6, 연합뉴스)
 - 5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지난 7월 '퍼시픽포럼' 주최 미·일관계 콘퍼런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측 전문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내 기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일본 총리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주장함.
 - 이런 주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중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의 연장선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 우익들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일미군 기지가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로서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함.

- "한일, 주중 워싱턴서 재무장관회담 검토" (10/6,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오는 9~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삼아 양자 재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함.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양국 경제의 현황과 과제, 양국간 경제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함.
 - 한편, 중국을 포함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지난달 19일, 약 2년 5개월 만에 열렸지만, 한일 양자 재무장관 회담은 아베 정권 출범 전인 2012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개최되지 않았음.

- "일본서 5년간 반한시위 921건 발생" (10/7, 연합뉴스)
 - 외교부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0년부터 올 7월 말까지 일본 지역 공관 및 한인 밀집지역에서 모두 921건의 반한 시위가 있었다고 밝힘.
 - 연도별로는 2010년 22건, 2011년 89건, 2012년 310건, 2013년 319건, 올해 7월말 현재 181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주일본대사관

및 주요사카 총영사관 담당지역에서 일어난 시위가 각각 351건, 341건으로 전체 반한 시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 외교부는 반한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재까지 시위로 인한 한인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도쿄 내 대표적 한류 거리인 신주쿠(新宿)구 신오쿠보(新大久保) 지역이 방문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함.

■ 정부 "日 일부정치인 고노담화 훼손 지속 시도 개탄" (10/7, 연합뉴스)

-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의 역할이 끝났다고 발언한 것을 강하게 비판함.
- 외교부 당국자는 7일 "(하기우다 특별보좌의) 개인 견해인지 여부를 떠나 일본의 일부 정치인이 고노담화 훼손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일본 측이 그런 역사퇴행적인 언사를 계속하면 할수록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보다 강한 반발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함.
- 앞서 하기우다는 전날 한 일본 방송에 출연, "정부는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은 하지 않지만 무기력하게 만들면 된다"면서 고노담화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함.

■ 아베 총리 "국제회의 기회에 한일정상회담 희망" (10/8,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앞으로 다양한 국제회의의 기회에 (한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한발 한발 서로 노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임.
- 한편, 한일정상이 동반 참석하는 다자 국제회의는 이달 중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내달 베이징(北京)과 네피도(미얀마 수도)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있음.
- 아베 총리는 "(한일이) 이웃이기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럴수록 전제조건을 붙이지 말고 정상끼리를 포함해 솔직한 대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노력이나 입장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계속 설명을 거듭해 나갈 생각"이라며

"이런 끈질긴 노력을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함.

- "일본, '군위안부해법 제시 어렵다' 한국에 통보" (10/9,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일 차관급 전략대화과 지난달 19일 외교부 국장 협의 등에서 "현재 일본 측에서 위안부 문제 타개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전했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이 9일 보도함.
 - 닛케이는 한일 양국이 지난 4월 이후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장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기금 설립, 총리의 사죄 편지 등 과거 검토됐던 방안을 토대로 한 구체적 해법이 부상했지만 일본 총리 관저(한국의 청와대 개념) 측에서 타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한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군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개최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일본 정부·여야, 산케이기자 기소에 일제히 반발 (10/9, 연합뉴스)
 - 일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한국 검찰의 결정에 일제히 반발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8일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데 대해 "국제사회의 상식과는 매우 동떨어졌다"고 말함.
 -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김원진 주일 한국공사를 불러 "보도의 자유와 한일관계 관점에서 매우 유감이며 사태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김 공사는 "한국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취한 조치"라며 "한일관계 전체와는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무라야마 "한일 정상회담 열어 양국 문제 해결해야" (10/9, 연합뉴스)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90) 전 일본 총리는 9일 승실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것은 세 가지"라며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위안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등 양국간 문제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아베 신조 정권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본은 틀림없이 두 담화를 계승할 것"이라며 "일본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두 담화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냄.
- 또한 그는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의 모든 내용을 계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발표도 했었지만 그 뒤 각의에서 계속 계승하겠다고 번복했다"며 "고노 담화에 대해서도 검증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계승해나갈 것이고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했다"고 하며 아울러 "아베 정권이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에는 명백히 반대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는 지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말함.

■ 정부, 내주 유엔서 '위안부' 日태도 강하게 비판방침 (10/10, 연합뉴스)

-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3~15일 진행하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도 높게 거론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거듭 압박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성노예는 근거 없는 중상"이라고 말하고 아베 총리의 최측근은 "고노담화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하는 등 일본 정치인의 역사 퇴행적 언행이 반복되는 것을 비판할 것으로 관측됨.
-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전시 성폭력 문제가 국제전범재판소에 의해 처벌되는 국제법상 전쟁범죄 및 반인도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거론하면서 조속히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주일대사관 "한국문화재 관련 문서 공개 일본에 요구했다" (10/10, 연합뉴스)

- 주일 한국대사관은 일본 내 한국 문화재 내역과 관련한 비공개 문서를 공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했다고 10일 밝힘.

- 김원진 주일대사관 정무공사는 이날 열린 주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 1950~60년대 한일 문화재 반환 협상 때 일본 정부가 자국내 한국 문화재 목록 등을 총체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최근 드러난 것과 관련한 정부 대책을 묻는 심재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일본 소재 문화재에 대한 환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 이와 관련, 지난 7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소송 항소심 선고를 계기로 공개된 도쿄고법의 판결문과, 판결에 앞서 일본 외무성 당국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일본 정부가 자국 내 한국 문화재 목록을 총체적으로 은폐한 정황과, 한국에 돌려줄 문화재들에 대해 희소성을 평가한 뒤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다고 본 품목 위주로 반환을 결정한 정황이 적시됨.
- 정부 "日,위안부 강제성 부인 무모노력 당장 포기해야" (10/11, 연합뉴스)
-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글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데 대해 12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근 일본 외무성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반인도적 성격을 적시한 아시아여성기금의 대국민 호소문마저 자체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공언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함.
 - 또한 정부는 "일본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지난 20여 년간 권위 있게 결론을 내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려는 무모한 노력을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양심과 정의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이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기금인 '아시아여성기금' 모금에 동참하라고 요청하면서 발기인 16명이 1995년 7월 18일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홈페이지 '역사인식' 코너에 게시하다 지난 11일 삭제함.

라. 미·중 관계

- 미국·중국·호주 첫 합동군사 훈련 돌입 (10/8,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 호주 등 3개국이 7일(현지시간) 호주에서 처음으로 합동군사 훈련에 돌입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8일 보도함.
 - 데이비드 존스틴 호주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훈련 참가자들은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기술 설비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호주의 혹독한 환경에서 군인들의 생존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호주가 중국 및 미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함.
 - 이번 훈련에 중국군이 참가한 것은 지난 7월 호주를 방문한 관찬룽(范長龍)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만나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미국이 동맹국인 호주에 병력 배치를 확대키로 합의하는 등 양국이 '중국 견제'로 해석될 만한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됨.

- "오바마-시진핑, 내달 이슬람국가 대응책 논의" < SCMP > (10/9,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다음 달 12일 정상회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함.
 -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중국 외교부가 지난 7월 미국 국무부에 테러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제안했다"며 "두 나라가 이런 회의를 여는 것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이라고 말함.
 - 또한 중국이 회의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자국 내 테러단체와 해외 세력과의 연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하며, 기후변화와 에볼라 대처 방안, 홍콩 시위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함.

- 중국, 미·일 방위지침에 "신중 행동" 촉구 (10/9,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이 추진중인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과 관련, 9일 미·일 양국에 신중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임.
 -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전날 "우리는 일본과 미국의 방위협력지침 수정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강한 경계감을 표시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다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서 그 어떤 외세의 압력도 중국 정부의 국가주권과 영토 안정을 실현하려는 결심과 의지를 흔들 수 없다"고 언급하며 "관련국이 신중하게 행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함.

■ 중국 "미국, 외국 겨냥 해킹 중단해야" (10/9,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최근 중국인들의 미국을 겨냥한 해킹 공격을 비난한 것과 관련, "없는 사실을 날조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미국 측에 외국을 겨냥한 해킹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없는 사실을 날조해 고의로 중국을 모독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다"고 언급, "우리는 미국 측에 다른 나라를 향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행하는 인터넷 공격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다"면서 미국 측에 이 같은 비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 앞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5일(현지시간) CBS 방송의 '60분'에서 미국 기업의 사업기밀을 노리는 중국 해커들을 "술취한 도둑"이라고 표현하면서 중국 해커들로 인해 미국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 측을 비난한 바 있음.

■ 미 의회기구 "중국, 울들어 탈북자 단속 강화" 비판 (10/10, 연합뉴스)

- 미국 의회 산하 초당파적 독립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중국 정부는 울들어 북·중 국경수비를 확대하고 탈북자를 구금·송환하는 행위를 늘리는 등 탈북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함.
- 중국위원회는 이날 발간한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장성택 처형 등 북한 내부의 정치가 불안정해지면서 북·중 국경수비가 급격히 강화됐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탈북자들을 구금하고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자 유엔 북한인권위원회(COI) 보고서의 지적대로 북한의 인권범죄를 돕는 것"이라고 비판함.
-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중국과 관련국들이 참여해 북한 탈북자 문제를

논의하는 다자기구 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의 AIIB 추진놓고 미국-중국 갈등 고조 (10/10, 연합뉴스)

-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과 호주의 AIIB 창립회원국 참여를 공식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두 나라를 압박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함.
- 시 주석은 7월 방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AIIB 가입을 직접 제안한 바 있다. 중국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돕기 위한 AIIB 설립을 작년 10월 제안한 뒤 초기자본금 500억달러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냄.
-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AIIB를 통해 미국과 일본 주도의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위상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보고 저지 작업을 진행 중이며, NYT는 미국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과 호주 등 동맹국들을 상대로 AIIB에 참여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전함.

■ 중국 '홍콩인권 추락' 거론 미국에 "내정간섭" 반발 (10/10,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10일 미국의회가 홍콩을 비롯한 중국 내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힘.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해당 위원회가 중미관계를 방해하고 훼손하는 잘못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홍콩사무는 중국의 내정으로 그 어떤 외국정부나 기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언급함.
- 일부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대중 집행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인권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하고 미국 고위관료의 홍콩 방문 등 미 당국의 개입을 촉구함.

■ 중국 관영언론 "미국, 홍콩시위대 조종해 '색깔혁명' 조장" (10/12, 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미국이 홍콩 반중(反中) 시위대를 조종해 '색깔 혁명'(정권 교체혁명)을 일으키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함.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11일(현지시간) 인민일보가 10일자 해외판 1면에 실은 '미국은 색깔혁명이 질리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홍콩 시위 세력을 지원해 중국을 곤란에 빠뜨리려 한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 마리 하프 부대변인은 10일 "미국이 홍콩 내 단체나 인물, 정당의 활동을 조종하고 있다는 주장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고 언급하며 "홍콩인 들은 보통 선거권을 향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며 "홍콩에서 일어나는 일은 홍콩인들에 관한 것이며, 이에 대한 다른 주장은 문제의 논점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함.

마. 미·일 관계

- <미일동맹 행동반경 지구 전체로 확대…중국견제 공조강화> (10/8, 연합뉴스)
 - 8일 발표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 중간보고서에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과 갈등을 불사하며 해양 진출 확대를 꾀하는 중국을 겨냥해 양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중간보고서에 담긴 양국의 주된 의중으로 풀이됨.
 - 중간보고에 '일본 주변'이라는 자위대 대미 지원활동의 지역적 한계를 없애는 내용을 담는 동시에 미군에 대한 지원활동의 사례들을 열거한 것은 해양진출에 속도를 내는 중국이 필리핀과 같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국과 충돌할 때 자위대가 새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됨.
 - 또 중국의 활동이 활발한 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미일 공동 대처도 중간보고에 새롭게 포함하였음.
- <미일 새 방위지침에 워싱턴 환영…재무장화 우려는 '실종'> (10/9,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지리적 제약 없이 미·일간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 방위협력지침을 마련한 데 대해 워싱턴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의 기류는 '환영' 일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 국방비 삭감과 신(新) 고립주의 확산 속에서 미국의 안보 부담을 적극적으로

나뉘지겠다고 나선 일본을 한목소리로 높이 평가함.

- 그러나 군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로 표출된 일본 아베 정권의 급속한 우경화 움직임과 그에 따른 '재무장화'를 경계하는 한국 내부의 우려에 동조하는 목소리는 아주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미일, 외교·국방·경찰 상설협의체 추진" <닛케이> (10/12,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은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에 더해 일본 경찰과 해상보안 당국자까지 참가하는 상설 협의 기관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지(닛케이)가 12일 보도함.
- 양국은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중국 어민이 상륙하는 등의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경찰과 자위대 출동의 경계에 있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닛케이는 소개함.
- 이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일본 경찰 및 해상보안청 측과 부대 운용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색지대 사태' 발생시 범죄 수사 차원에서 단속할지,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임할지 등을 기민하게 결정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임.

■ "미·일·호주, 다음달 3자 정상회담 개최 추진" <요미우리> (10/13,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 호주가 내달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함.
- 세 나라는 11월 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아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이는 2007년 이후 7년 만이고, 회담이 열리면 3개국 정상은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를 염두에 두고 해양안보 협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바. 중·일 관계

- 중국 시진핑 주석 측근 리샤오린 일본 방문 (10/7,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인 리샤오린(李小林)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회장이 7일 일본을 방문하여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 등 정권의 요인들과 면담할 것이라고 교도는 전함.
 - 이는 내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리 회장의 방일은 정상회담 가능성 모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리셴넨(李先念) 전 중국 국가주석의 딸인 리 회장은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직후인 2012년 12월 도쿄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했으며 작년 3~4월에도 도쿄를 찾아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 등을 만났음.

- 일본, 중국에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설명할 듯 (10/7,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해 한국뿐 아니라 중국 등 다른 주변국(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도 관련 내용을 설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NHK가 7일 보도함.
 - 일본이 동남아 국가는 물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 등을 놓고 갈등 중인 중국에까지 관련 내용을 설명하려는 것은 가이드라인 개정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는 자국의 논리를 부각해 반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한편,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일 서울에서 가이드라인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에 관해 한국 정부 측에 설명함.

- "아베, 야스쿠니 가을제사때 참배 않기로" <교도> (10/10,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는 17~20일 야스쿠니(靖國)신사 가을제사(추계 예대제)때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10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아베 총리는 다음 달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실현을 목표로 하는 중일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통신은 전함.

- 대신 아베 총리는 개인 비용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칠 생각이라고 통신은 보도함.

사. 중·러 관계

- 중국 리커창 총리 사흘간 방러...에너지 협력 등 논의 (10/12, 연합뉴스)
 -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가 12일(현지시간)부터 사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함.
 -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리 총리는 모스크바 도착 다음날인 13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제19차 양국 정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고, 양측은 이 회담에서 러시아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가스를 중국 동북 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한 '동부 노선' 가스 공급 사업에 관한 정부 간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중국 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 소장 알렉세이 그루즈데프가 밝힘.
 - 러시아는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의 코빅타 가스전과 극동 야쿠티야 공화국의 차얀다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약 4천km의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과 중국 동북 지역으로 연결되는 동부 노선 지선을 통해 중국에 공급할 계획이며,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의 알타이 지역에서 중국 서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서부 노선' 가스관을 깔아 연 300억 m³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노동자 300명, 러 주택건설 투입"(10/7, 자유아시아방송)
 -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주(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체슬라프 슈포르트 주지사는 이날 러시아를 방문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경험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로 북한 기술인력 파견을 들었음.
 - 하바롭스크 내에서 진행된 수재민들을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사업에 북한 건설 노동자 300명 이상이 투입돼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함.
 - 앞서 러시아 연방 이민국은 지난 해(9월말 기준)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수를 2만 1,447명으로 집계하고 이 중 1,600명(7.5%)이 하바롭스크주에 파견됐다고 밝힌바 있음.

- 북한, 유엔서 첫 인권설명회... "북한인권 결의안 반대"(10/8, 연합뉴스)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 관련 설명회를 가짐.
 - 북한은 설명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대화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 이날 설명회에는 언론 종사자와 외교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북한 측에서는 유엔대표부의 리동일 차석대사, 김성 참사관, 그리고 최명남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이 설명 및 질의응답에 나섰다.
 - 리동일 차석대사는 지난달 13일 북한의 조선인권연구협회가 펴낸 보고서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북한의 인권이 열악하지 않음을 피력하고, 남한의 군사훈련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북한인권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최명남 부국장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제안한 남북 인권대화도 열려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음.
 - 김성 참사관도 북한 결의안이 추진된다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며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또한 최 부국장은 정치범수용소는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다만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정신적으로 향상되는 노동교화소는 있다"고 말했다.
- "北, 탈북방지 위해 '잠복초소' 증축... '합동순찰조' 조직"(10/8, 데일리NK)
 - 북한이 최근 국경연선에 탈북방지 목적으로 '잠복초소'를 배로 늘렸으며, 국경경비대에 도 보안국까지 동원해 '합동순찰조'를 조직, 국경경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알려왔음.
 -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국경연선에는 함경북도 보안국의 일반·경제 감찰처와 시, 군 보안서 감찰과 보안원 등 600~700여 명이 동원됐으며, 이들은 국경경비대 군인들과 함께 4인 1조를 이뤄 일반 주민들은 물론 개별 군인들의 야간 통행까지 통제하고 있음.
 - 소식통은 야간 순찰조가 낮에 잠을 자고 어두워지면 순찰하는 것을 두고 주민들이 "바쁜 수확 철에 저것들은 두더지처럼 한가하게 낮잠만 자냐. 어디 있다가 밤에만 '빨쥐(박쥐)'처럼 나타나는가"라며 "과수꾼 열 명이 도적 하나 못 당한다는데 저런다고 누가 잡히겠냐"는 반응을 보인다고 전함.
- WFP 대북 식량지원 3개월 연속 증가(10/8, 미국의 소리)
 -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에 대한 영양 지원이 최근 7, 8, 9월 세 달 연속 증가했으나,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했음.
 - 실케 버 대변인은 지난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91만 2천 여 명(912,919)에게 2천300t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8월에 69만 5천여 명에게 2천 75t을 분배했던 것에 비해 11% 증가한 규모임.
 - WFP의 대북 영양 지원은 8월에도 7월에 비해 14% 증가했고, 7월에도 전달에 비해 24% 증가했음.
 - 지난 9월 식량 지원을 받은 북한 주민의 수도 전 달인 8월에 비해 약 22만 명 증가했음.
 - 하지만 이는 한 달에 1만t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해에 비해 45%가량 감소한 것임.
 - 한편 세계식량계획이 최근 공개한 '2014 북한 가뭄과 식량안보 상황'에 따르면, 지난 달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은 전달과 비슷한 수준인 250g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 보고서 '북한, 시민사회 소요 가능성 높은 나라'(10/9, 미국의 소리)
 - 영국의 국제 위기 분석 기업인 '메이플크로프트'는 8일 발표한 '시민사회 소요 지수'보고서에서, 북한을 시민사회의 소요 사태가 발생할 잠재적 위험이 높은 나라로 분류했음.
 - 보고서는 세계 197개국을 대상으로 정부의 힘과 정치적 시민적 권리, 국가 안보 세력의 권력 남용, 경제 상황, 시민사회 소요의 빈도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며, 이를 바탕으로 5개 등급으로 분류했음.
 - 0점에서 2.5점 사이는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 7.5점에서 10점 사이는 위험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북한의 경우는 4.9점으로, 2.5점과 5점 사이의 위험이 높은 나라 69개국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음.
 - 북한의 이러한 순위는 197개 대상국 가운데 74번째로 높은 것임.

- FAO "북 올해 식량 30만톤 부족"(10/9, 자유아시아방송)
 - 식량농업기구(FAO)는 9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014년 3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식량부족분 34만 톤 중 4만 톤만 확보하는데 그쳐 외부 지원이 필요한 36개 식량부족 국가에 포함했음.
 - FAO는 북한의 2014년 곡물 수확이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북한 주민 1천 600만명이 식량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음.
 - FAO는 또 북한의 식량체계가 여전히 외부 충격에 취약하며, 단백질이 풍부한 작물 재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음.
 -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경제 상황이 나쁘고 농기계와 비료 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함.
 - 의 피어로 콘포르티 분석관은 영양실조로 분류되는 북한 주민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의 도입과 영양상태가 나쁜 주민을 배려하는 식량 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 FAO, "북한 올해 190만 쌀 수확" 전망(10/10, 미국의 소리)
 - 식량농업기구(FAO)는 10일 발표한 '식량전망 보고서(Food Outlook)'에서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은 2013년과 비슷한 190만 t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북한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와 같은 67.8kg, 쌀과 옥수수를 합한 곡물 소비량은 145kg으로 나타났으며, 곡물 소비량은 유엔의 1인당 권장 소비량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임.
 - 한편 올해 돼지고기 생산량은 11만 4천t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음.

- 북한 "우리도 자체 인권 결의안 내겠다"(10/10, 연합뉴스)
 - 북한 유엔대표부는 유럽연합(EU) 등이 북한의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 결의안을 추진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국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각국 유엔대표부에 돌렸음.
 - 북한 유엔대표부는 편지에서 "EU와 일본이 만든 초안은 즉각적인 대결을 의미한다"면서 자체 결의안 초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음.
 - 초안에는 북한의 무상 교육 및 의료 시스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최근의 조치들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임.
 - 그러나 북한이 편지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로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제출할지는 미지수임.
 - 유엔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자기들 문제와 관련해 결의안을 낸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뭘 결의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음.
 - 또 다른 유엔 소식통은 인권 관련 결의안은 3위원회에서 먼저 검토되나,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로 결의안을 낼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음.

- 주중 북한대사관, 국제사회 '인권결의 움직임' 맹비난(10/11, 연합뉴스)
 - 북한은 국제사회가 자국의 반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 주중 북한대사관의 문성혁 공보참사관은 11일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

時報)에 실린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 추진 움직임에 대해 "적대 세력이 조선(북한)의 이미지를 손상하고 조선 인민이 선택한 제도와 사상을 말살하려는 비열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 이에 더해 지난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해 "조선을 미친 듯이 미워하는 자들이 날조한 보고서는 신성한 유엔 무대에서 토론자료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음.
- 그는 "인권 문제를 핑계로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지도자를 ICC에서 처치하려는 음모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으며 "만약 인권 영역에서 앞으로 국제형사처벌제도가 '합법화'하면 미국과 서방국가가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인권을 핑계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국가의 지도자도 '인권 피고석'에 세우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北 강석주, EU에 '북한인권결의 내용 완화' 요구(10/12, 연합뉴스)

-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 사법기구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가 EU에 결의안 수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음.
- 지난달 유럽 국가를 순방한 강석주는 지난달 9~10일 벨기에 방문 시 람브리니디스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와 만나 EU측과 다시 인권대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그 전제로 북한인권 결의 내용을 완화해달라고 직접 말했다고 북수의 소식통이 12일 전했다.
- EU측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D)의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정부는 EU가 추진하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 북한 인권

- 탈북자 단체, 8일 '北인권보고서' 규탄 기자회견(10/7, 데일리NK)
 - 탈북자 단체 북한인민해방전선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북한의 인권보고서에 대해 비판하고, 이후에 영문으로 된 규탄성명서를 미국, 중국, 일본 대사관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최근 발표한 자체 인권보고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밝힘.
 - 조성일 북민전 국장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고 단죄하는 데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음.

- EU "북한과의 인권대화 여부 협의 중"(10/8,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리동일 차석대사는 지난 7일 개최한 북한인권 설명회에서 내년에 인권대화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익명을 요구한 유럽연합 관계자는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대화 재개 제안에 아직 합의한 바 없으며 적합한 절차를 밟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관계자는 지난 9월 강 국제비서 등 북한대표단이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했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던 점도 지적했음.

- 통일부, 7년째 '北인권' 예산 제자리...내년 4000만원(10/8, 데일리NK)
 -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부 북한인권 관련 중기재정예산 요구 내용'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내년도 북한인권 관련 사업 예산에 총 120억 4000만 원을 신청했음.
 - 이 가운데 120억 원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현재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야만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결국 통일부에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대내외 협력 사업을 이행해나가기 위해 신청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4000만 원에 불과함.
 - 이는 통일부 전체 예산의 0.02%에 불과한 수치로, 통일부의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2009년부터 7년째 제자리임.
 - 이와 관련 심 의원은 "매년 4000만 원에 불과한 예산 규모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통일부에게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음.

- 이어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을 위해 신청한 예산 가운데 '북한인권 실태조사 DB(데이터베이스) 구축·정책 연구·개발 및 홍보' 사업은 북한인권법 제정 없이도 현행 통일부령 제6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부연했음.
- 또한 "통일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윤상현 "北정치범수용소, 서울시 면적의 2배"(10/8,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자료를 기반으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정치범수용소 5곳의 총면적은 1천247.9km²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서울시 면적 605.2km²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음.
- 구체적으로는 평남 개천의 '14호 관리소' 128.2km², 함남 요덕의 '15호 관리소' 551.6km², 함북 명간의 '16호 관리소' 560km², 평남 개천(동림리)의 '18호 관리소' 7.1km², 함북 청진의 '25호 관리소' 1km² 등임.
- 윤 의원은 "정치범수용소는 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공포통치의 정점"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위한 고발과 감시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엔, 북한 김정은 '反인권 혐의'로 국제법정 회부 추진(10/9, 연합뉴스)

- 익명의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음.
- 유엔 소식통이 익명을 요구한 이유는 유럽연합이 마련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경우 유엔 윤리규정 등에 따라 결의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임.
- 이 소식통은 "북한인권결의안이 현재는 초안이기는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더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이번에 유엔이 유럽연합이 마련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국제 법정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 다만, 유럽연합이 마련한 인권결의안은 초안 형태여서 결의안 최종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어,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철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발, 안보리 일부 상임이사국의 유보적인 태도 등으로 컨센서스(합의) 대신 표결 방식을 채택해왔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운다는 초안의 골격을 유지한 최종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큼.

■ 미 국무부 '북한, 강제 수용소 인정하고 폐쇄해야'(10/9, 미국의 소리)

- 북한이 이례적으로 유엔에서 인권설명회를 열었으나,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인권 개선을 행동으로 보여 달라며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할 것을 거듭 촉구했음.
- 쟈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2주전 유엔총회에 참석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폐쇄를 촉구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노동교화소뿐 아니라 요덕수용소와 같은 악명 높은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확인했음.
-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북한의 인권설명회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VO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음.
- 또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리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의지도 분명히 했음.

■ 국제엠네스티 '북한, 강제 수용소 즉각 공개해야'(10/9, 미국의 소리)

- 국제 엠네스티 영국지부는 북한이 지난 7일 유엔 본부에서 인권설명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강제 수용소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음.

- 국제 앰네스티 영국지부의 케이트 앨런 지부장은 8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교화소가 수감자들을 정신적으로 향상시키는 곳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위장하는 새로운 종류의 이중화법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동안 북한의 수용소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맞아 죽었다고 지적했음.
 - 앨런 지부장은 북한은 감출 것이 없다면 국제 앰네스티와 유엔, 다른 인권 감시단체에게 수용소를 즉각 개방해 북한 측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음.
- “적법절차없는 북 사형제도 폐지돼야”(10/10,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인권단체들은 10일 제12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북한의 공개처형 등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음.
 - 전 세계 120여 개국 180여 개 인권단체의 연합체인 국제인권연맹(FIDH) 미셸 키센카터(Michelle Kissenkoetter) 아시아담당국장은 10일 북한의 사형제도가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음.
 - 키센카터 국장은 적법한 절차 없이 사형이 자행되며,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구제할 법적 제도도 없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음.
 - 영국의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대변인실 관계자도 북한의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둔 헨즈오프카인의 대변인도 10일 북한에서는 올해 초 남한을 포함한 외국인과의 불법 통화, 남한 드라마 청취나 외국 라디오 방송 청취, 인신매매, 마약 판매나 사용, 탈북자를 돕는 행위 등을 국가전복 기도혐의로 규정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비판했음.
- 미국 '북한인권 유린 책임 물어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지지'(10/11, 미국의 소리)
-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책임을 물겠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음.
 - 그러나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결의안 초안과 관련해 유엔에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음.

3. 탈북자

- 지난 1년 미국 입국 탈북 난민 8명...역대 최저(10/7, 미국의 소리)
 - 미국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이 발표한 2014회계연도 난민입국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명, 3월 2명, 4월1명, 그리고 7월 4명 등 모두 8명의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음.
 - 이 같은 수치는 미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2010년의 8명과 함께 역대 가장 적은 것임.
 - 미국 북한인권 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는 지난 달 22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현재 태국의 수용소에서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은 최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임.

- 한국 국적 취득 후 외국 망명신청 탈북자 최근 5년간 112명(10/8, 미국의 소리)
 - 한국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벨기에와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 네 나라가 한국 정부에 141명의 탈북자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음.
 - 한국 정부가 신원 조회를 위해 지문을 확인을 한 결과, 한국 국적 취득 후 다시 유럽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는 대상자의 80%인 112명이 한국에 정착한 적이 있는 탈북자로 드러났음.
 - 국가별로는 벨기에는 76명 중 70명, 영국은 55명 중 33명, 덴마크는 7명 중 6명, 네덜란드는 3명 모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음.

- 탈북민 809명, 거주지 등 소재 파악 안돼(10/8, 뉴스1)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 2만 6,854명 가운데 3%에 해당하는 809명이 '거주불명등록자'로 파악됨.
 - 이들은 특히 탈북민 보호를 담당하는 지역별 거주지 보호담당관에 의해서도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어, 현재 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소재지를 파악 중임.
 - 심 의원은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먼저 이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에 대한 거주지 보호담당관을 증편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음.

- 미 의회기구 "중국, 울들어 탈북자 단속 강화" 비판(10/10, 연합뉴스)
 - 미국 의회 산하 초당파적 독립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발간한 올해의 연례보고서에서 탈북자 유입 차단을 위한 북·중 국경수비 확대, 탈북자 구금·송환 등 중국 정부의 행위를 비판함.
 - 보고서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구금하고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자 유엔 북한인권위원회(COI) 보고서의 지적대로 북한의 인권범죄를 돕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에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들에 대해 다른 법률적 대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음.
 - 이와 함께 "중국 내 탈북자 여성의 인신매매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현재 중국 내 탈북자의 70%가 여성이며 이중 많은 숫자가 강제결혼과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신매매자들에 대한 기소·처벌 및 중국 시민과 결혼하거나 결혼해 아이를 가진 북한 여성들의 지위 합법화를 주문함.
 -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중국과 관련국들이 참여해 북한 탈북자 문제를 논의하는 다자기구 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탈북자 정보 북에 넘긴 탈북 여성(10/12, 중앙일보)
 - 경북경찰청은 40대 탈북 여성 A씨를 다른 탈북자들 동향을 북한에 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음.
 - 이 여성은 2011년 탈북한 뒤 다방과 식당 등에서 일하며 대구·경북 지역 탈북자들의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생활 형편 등의 정보를 수집해 일부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음.
 -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는 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받아 추적을 시작했으며, 현재 상당량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음.
 - 현재 경찰은 A씨가 탈북한 뒤 국내에 있는 북한 공무원에게 포섭됐는지, 아니면 위장 탈북한 것인지 등을 캐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의 협조를 얻어 공범이 있는지 등도 확인 중임.

4. 이산가족

- 정부, 2차 고위급접촉서 이산상봉 정례화 등 제기(10/6, 연합뉴스)
 - 정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열릴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상봉 정례화, 생사 전면 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문제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음.
 -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전날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나 전면적 생사 확인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안다"고 밝힘.
 - 2차 고위급 접촉 의제와 관련, "우리는 지난 8월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의할 때부터 이산가족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외에 남북이 서로 관심을 갖고 논의하기를 원하는 의제들에 대해 폭넓게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연내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가능성에 대해 "남북한 간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며 "그 시기를 정하는 데는 상봉의 시급성, 중요성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음.
- 김무성 "남북대화 물꼬 트인 게 AG 최대 성과"(10/6, 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수용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면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된 것이 이번 아시안게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음.
- 北,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 체류비 일부 내고 귀환(10/7, 연합뉴스)
 -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 귀환 전 남측 체류비 일부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 한편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대북 쌀·비료지원 연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문제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 해결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쌀과 비료(지원) 연계 방안을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음.

- 정총리 “北,인도적 문제위해 적극 대화 나서야”(10/12, 연합뉴스)
 -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열린 제32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5. 납북자

- 아사히 '일본인 55% 납치문제 비관적'(10/8, 미국의 소리)
 - 일본 아사히 신문이 전국 유권자 4천 명으로 대상으로 지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납치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은 29%에 그쳤음.
 - 북한이 납치문제 재조사의 1차 조사결과를 아직도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은 89%에 달했음.
 - 그러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다루는 아베 신조 정권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0%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31%에 그쳤음.
- 일본, 북한의 납치문제 해결 주장 반박(10/9, 미국의 소리)
 -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7일 유엔에서 열린 인권설명회에서 북한이 유엔에서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며, 일본이야말로 북-일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재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거듭 촉구했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재조사 결과 통보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했음.
 -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의 재조사가 진전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日誌 "아베, 납북자 협상 北에 농락당해"(10/10, 동아일보)
 - 일본 주간지 슈칸포스트 최신희(10일자)는 북한이 납북자 재조사와 관련해 "현재 생존한 납북자는 없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으나, 일본 측은 '납북자 구제도 못한 채 대북 제재부터 해제했다'는 비판과 함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북한에 농락당했다는 점이 알려질까 우려해 이런 통보를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잡지는 전했다.
 - 동아시아 정치에 정통한 일본 학자는 실제 일본 정계에 그런 기류가 있으며, 기사가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슈칸포스트에 따르면 북한이 납북자 재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이 대북 독자제재 일부를 해제한 올 7월 3일 이후 양국은 3차례 비밀협상을 열었으며, 8월 21~2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1차 비밀 협상에서 북한은 현 시점에서 살아있는 납북자가 없다는 내용의 납북자 재조사 중간보고의 개요를 전달했으며,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2, 3차 비밀협상에서도 지속되었음.
 - 그러자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지난달 중순에 열린 3차 협상에서 "그런 중간보고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한다"고 말했으며, 같은 달 19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한이 중간보고 할 게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 슈칸포스트는 "모두 환상이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허위 보고에 큰 망신을 당했다"고 보도했음.

- "일, 납북 주범 신광수 신병인도요구"(10/10, 자유아시아방송)
 - 북·일 간 일본인 납치문제 협상이 시작된 이후 협상에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일본 TBS 방송은 지난 9일 일본인 납치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광수의 신병인도 요구가 납치자 문제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음.
 - 이 방송은 RENK의 대표 이영화 간사이대학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정부가 북한정부에 신광수의 신병인도를 요구함으로써, 납치자 문제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전했다.
 - 방송은 신광수가 1985년 한국에서 체포되어 된 후,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2000년 특별조치로 풀려나 북한으로 송환된 후에 북한에서 영웅대접을 받아왔으며, 북한이 신광수를 일본에 인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영화 교수의 말을 뒷받침했음.

- 아베 "납북자문제 해결위해선 북한과 대화해야"(10/12,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조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 당국자를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한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음.
 - 아베 총리는 이날 미야기현 센다이시 시찰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국자 방북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자세로 대응하지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으나, 당국자 파견을 언제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유니세프, 북한 어린이 170만 명에 구충제 등 지원(10/6, 미국의 소리)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다음 달 북한에서 '어린이 보건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북한 어린이 170만 명에게 폐렴 예방을 위한 약품과 구충제를 나눠줄 계획임.
 - 유니세프 아시아사무소의 앤드류 브라운대변인은 북한 보건성과 함께 행사를 결정했으며, 폐렴 예방이 주목적이라고 밝혔음.
 - 이번 행사를 통해 6개월에서 5세 미만 어린이에게 비타민 A를, 24개월에서 만 5세 미만 어린이와 6세에서 14세 미만 아이들에게 구충제를 나눠 줄 계획이며, 북한 보건성 관계자와 탁아소 관계자 등 6만여 명은 유니세프와 함께 아이들에게 약품과 폐렴 예방법이 담긴 자료도 배포할 예정임.

- 대북식량지원 소폭증가 불구 크게 부족(10/7,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에 대한 영양지원 규모가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여전히 지원 대상의 절반 이상이 유엔의 식량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WFP가 지난달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91만 3천여 명에 약 2천 300톤의 식량을 제공하면서, 지난 8월과 비교하면 지원을 받은 주민의 수는 약 70만 명에서 91만 명으로 21만여 명 늘었고 식량 규모도 2천75톤에서 2천300톤으로 약10% 증가했음.
 - WFP의 실케 버 아시아 지역 대변인은 영양강화 식품의 재료가 여전히 부족해서 지난달 지원 목표인 180만여 명의 절반에만 영양 강화 식품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버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진해 북한으로 들여갈 곡물을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지원 규모 축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 프NGO, 대북지원사업 일부 이달 종료(10/8, 자유아시아방송)
 - 프랑스의 민간 구호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Triangle GH)는 황해북도 일원의 식량과 식수개선 사업의 지원 시한이 이달 말로 종료됨.
 - 이 단체의 아시아 지원 담당자는 황해북도 소흥시의 유아원과 학교에 하루에 최대 58만 리터의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 단체는 소흥 지역 식수개선 사업이 마무리 되더라도 노인 지원 사업 등 3건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 홍콩 옥스팜의 기부를 받아 지난 4월에 시작한 소흥시의 추가 식수 지원 사업은 올해 12월에 마무리되며, 나머지 2건의 지원 사업은 은퇴한 노인을 위한 거주지 마련과 건강 개선에 집중될 예정임.
 - 이 단체는 2016년 3월까지 북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할 '은퇴자시설에 사는 노인들의 식량문제 개선 사업'은 유럽연합 국제개발청 (EuroAid)으로부터 지원 받은 약 100만 달러로 27개월 동안을 북한에서 진행할 계획임.
 - 이밖에 내년 2월까지 프랑스 국제개발처의 지원을 받아 보살펴 줄 가족이 없는 노인에 거주 시설을 제공할 계획임.

8. 북한동향

-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유엔통보모임, 10월 7일 유엔본부청사에서 진행 (10/8, 중앙통신)
 - 유엔주재 여러 나라 대표부들의 외교관들과 인권관계자들, 비정부 인권기구 대표들, 유엔주재 기자단 등 150여 명이 참가하였음.
 - 통보모임에서는 인권문제와 관련한 공화국의 원칙적 입장과 인민대중의 인권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언급되었으며 이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음.
 - 대다수의 모임 참가자들이 공화국의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제도, 인민들의 충분한 인권향유실상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공감하였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